

朴 “경제 재도약 도와달라” 文 “경제정책 기조 바뀌어야”

朴대통령·여야대표 청와대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만나 경제와 민생, 남북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동은 애초 예상했던 1시간을 넘겨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됐으며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운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회동 분위기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이날 청와대 회동은 시작부터 ‘살얼음판’ 분위기였다. 문 대표가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작성한 듯 날선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표님 취임 이후에 정식으로 뵙는 게 처음이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고 덕담을 건넨 뒤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요구

대선 이후 2년여만의 만남

경제·안보 해법 놓고 ‘평행선’

이에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문을 연 뒤 “국민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 ‘총체적 위기’로 규정했다. 특히 전월세값 폭등을 거론하며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회담 기류가 이처럼 싸늘해지자 마지막으 모두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 대표가 그나마 분위기를 완화를 시도했다. 김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이번 좋은 만남을 통해 상생 정치를 이뤄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심어본 간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고 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

으며 남북 문제 등에 관해서도 대화가 이어졌다.

◇다양한 의제 논의=이날 3차 회동에서 인식을 같이 한 주요 의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법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며 “문 대표는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야 대표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3차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급히 처리 요청한 경제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합의했으며 연말정산에 관

해서는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정부안을)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야 대표에게 “순방의 결과와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 달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문 대표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비판했다. 또 “수출중심 경제정책은 실패한 만큼 서민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의 전면 도입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 등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전월세값 폭등 등 서민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포스코發 대기업 사정

다음은 신세계·동부?

검찰이 주요 대기업 여러 곳에 대한 비리 첩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포스코 수사로 시작한 대기업 사정정국이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첩보는 대부분 1~2년 전 검찰에 접수됐으나 수사에 진척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부정부패 척결이 화두로 떠오른 국면과 맞물려 본격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17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세계와 동부그룹 주변에서 포착된 수상한 금융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첩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확인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각각 특수부(입력력 부장검사)와 공정거래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계류돼 있다.

신세계는 그룹 계열사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물품거래에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돈이 법인과 임직원 계좌 사이를 비정상적으로 오갔다는 얘기도 나왔다. 누군가 회삿돈을 제멋

대로 꺼내 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동부그룹 김준기(71) 회장 주변의 ‘의심거래보고’도 진척 확보해놓고 있었다. 김 회장이 회삿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녀들에게 건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그동안 첩보 확인작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선불리 수사에 나섰다 가 오히려 기업활동에 타격만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도, 신세계 관련 첩보의 경우 한때 내사종결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수사에 신중히 접근하는 검찰의 이런 기류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져왔다. ‘살아있는’ 대기업에 대한 전면수사는 재작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신세계와 동부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불어닥친 사정바람 때문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자금 의혹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례적으로 그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금융조세조사2부에 접수된 동부그룹 첩보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재배당된 점도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들 첩보에 대해 “계좌를 보고 있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다. 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을 본격 추적하고 나설 경우 특별수사의 특성상 뜻밖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연금 개혁 공감...최저임금 인상 방안 이견” 여야 대변인 회동 설명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청와대 3차 회동 결과를 회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전문. 오늘 1시간 50분 동안 계속된 대통령초청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중동 순방성과 및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우선 대통령은 10여분 간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고 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남북 문제 등에 관해서도 대화가 이어졌다. 인식을 같이 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법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법안과 관련하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의 제외하면 논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는, 문 대표는 5500만원 이하 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천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하여 오늘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응해 달라고 제안했고, 문 대표는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